

106주년 3.8 여성의날 공동기획단 자료집

<내용>

- ◆ 만화로보는 3.8 여성의날의 유래
- ◆ 우리의 요구
- ◆ 박근혜정부 여성정책 분석

106주년 3.8 여성대회 공동기획단

3.8 여성대회

3월 8일(토) 오후 2시
보신각 (이후 행진)

여성을 반쪽짜리 노동자로 내모는 시간제일자리 중단하라!
저임금, 고용불안 여성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여성노동권, 생존권 외면하는 박근혜 퇴진하라!



우리의 요구

여성을 반쪽짜리 노동자로 내모는 시간제일자리 중단하라!
저임금, 고용불안 여성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5년 동안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여성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가 필요한 경력단절 여성노동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시간제 신규 일자리로 유인-흡수시켜서 실적 채우기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일자리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실업이나? 시간제나? 양자택일하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주된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데도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6,840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평균 시급의 44.7%, 비정규직 평균 시급의 7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 132만 명이 일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의 노동조건도 거의 무권리에 가깝습니다. 고용 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 돌봄 강사의 경우 26.3%가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계약자이며 이는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하는 것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시간제라는 이유로 저임금, 근기법적용 제외, 무료노동까지 강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시간제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여성노동권, 생존권 외면하는 박근혜 퇴진하라!

정부는 이러한 시간제(여성73%)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정규직 시간제’라는 거짓 홍보로 시간제의 열악성을 은폐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울좋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노동자가 앞서 반대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여성정책

1. 고용률 70% 달성에 종속된 여성정책

지난 해 6월,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률 70%를 어떻게 달성하고자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의 골자는 시간제 노동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는 청·장년층 역시 대상으로 하지만 주요 대상은 여성입니다. 한국의 고용률은 2012년 기준 남성 74.9%, 여성 53.5%로 무려 20%p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는 2011년 OECD 평균 여성 고용률은 56.8%보다 낮은데다, 선진국인 미국(62%), 독일(67.7%)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고용률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이러한 계획 하에 올해 2월에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이하 여성 생애주기별 지원방안) 이 발표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 정책 전반을 망라한 것입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생애주기	주요과제
임신·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번째 육아휴직 이용자 급여 인상 -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 민간·공공부문 대체인력뱅크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반 등 시설보육 다양화 -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 아이돌보미 이용단가 현실화로 공급확대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취업모 우선 제공
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아동 모두 초등돌봄교실 이용 - 보육·돌봄협의체 구성해 연계 강화
재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학력 경단여성 대상 리턴십 도입 - 유형별 새일센터 설치, 전문직업훈련 강화 - 취업여성 고용유지 지원·관리 강화 - 시간선택제 채용·전환 활성화, 보호 강화
고용·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스마트워크 활성화 - 일하는 방식 개선 캠페인 실시 -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제고 - 여성인재 육성, 민관협력 강화 - 일·가정양립 지표 구축

여성 생애주기별 지원방안은 언뜻 보면 여성 맞춤형 정책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고용률 70% 달성 목표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① 지금 일하지 않는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고 ②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여성들의 출산·양육으로 인한 퇴직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여성을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시킬 방안으로는 주로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들의 출산·양육으로 인한 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이 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자는 서로를 보완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여성들의 일자리는 신규채용된 시간제 노동자들이 보완하고, 여성들이 전일제든 시간제든 노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사회서비스(돌봄) 분야의 시간제 노동자들이 메꾸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여성의 임금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이중부담은 그대로 둔 채, 서로가 시간을 쪼개 그 공백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곳곳에서 지적된 바대로 이 과정에서 임금도 사회보장도 쪼개지고 자기계발·승진의 기회도 박탈됩니다.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비단 일·가정 양립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녀임금격차가 심각하고, 여성들이 일자리에서 겪는 차별대우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은 일하는 여성들의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맞게 정책을 낸 것이 아니라, 고용률 70%라는 정책목표에 여성정책을 종속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2. 여성들은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강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시간제 노동자를 장려하는 정책효과로 여성 시간제 노동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기준 81만 명에 불과하던 시간제 노동자는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하여 2012년 8월 183만 명에 이릅니다. 성별로는 남성 51만 명에 비해 여성이 132만 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시간제 일자리의 질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정규직 대비 시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제 일자리는 사회보험 가입률, 퇴직금과 상여금 등에서 가장 낮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가능할까요? 또 시간제 일자리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면 정말로 좋을 일자리일까요?

1)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을 반쪽자리 노동자로 만든다.

우선 시간제 일자리는 저임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시간제 노동자에게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임금 산정단위가 '시간급'인 상황에서 임금은 거의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이미 여성은 남성의 61%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저임금에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더욱더 저임금 일자리를 확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부가 주모델로 삼는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여, '1.5인 모델'이라고 불립니다. 남편을 1, 부인을 0.5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구호 중 '우리의 노동은 반찬값이 아니다'라는 구호가 있는데요. 여성노동자의 노동이 가구의 부수적인 수입을 충당하면 충분하다는 인식을 비판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성도 한 명의 노동자로서 대우받아야 여성들도 남성들에 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기획할 수 있고, 노동자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적인 성취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제 노동은 이러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미 시간제 노동이 확산된 서구 국가들에서도, 시간제 노동자들은 전일제 노동자보다 2배 이상 높은 빈곤률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짧은 노동시간으로 실업보험 등의 수급조건을 맞추지 못해 복지제도로부터도 배제되는 등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의 이중부담을 완화하지 못하고 돌봄책임의 부담을 강화한다.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이 일을 하면서도 가정도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전제합니다. 이미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에 허덕이는 여성들의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반쪽짜리 임금을 받으며 가사노동과 양육, 돌봄 노동까지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1.5인 소득자 모델이 정착된 네덜란드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보육시설 확충이 지체되었고,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가장 먼저 보육시설과 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어 여성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시장에서 0.5취급을 받는 여성노동자는 가족 내에서도 돌봄노동을 떠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여성들은 정규직 여성들보다 일·가족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가족의 정서적 지원은 더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 시간제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시장과 가족 모두에서 경제활동이 저평가되는데, 이는 가족 내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가사분담을 요구하는 것도 어렵게 만듭니다. 밖에서 적은 시간 일하고 돈도 적게 벌어들여, 집안 일을 여성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간제 노동의 확산은 가사와 육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여성이 져야 한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3) 여성 일자리 전반이 시간제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 재편될 수 있다.

고학력 중산층 여성의 경력단절을 목적으로 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공무원, 교사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전일제 일자리를 쪼개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제 노동을 원하는 각종 방안(세제지원 등)들로 법으로는 전일제 전환을 보장해도 실제 전일제 전환은 어려워지는 양상이 될 것입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쪼갠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한편 저소득 여성들은 기존 민간부문에서 시간제일자리를 강요당해 10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 일자리에 내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마트에서 일하는 55세 이상의 여성 노동자들에게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간제 전환을 강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존 주 40시간 110만 원에서 주 20시간 월급 55만 원 일자리로 전환할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정부가 밝히는 시간제 노동의 원래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도 하고 아이도 기르라며 시간제 노동을 하라고 하지만, 양육책임의 부담을 벗고 전일제 노동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에게도 시간제 노동을 강요하는 효과를 낳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여성 일자리 전반은 물론이고, 고령자·청년 등의 일자리도 시간제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 재편될 것입니다.

3. 일자리 질 높이고 보육 공공성 확보하라!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고,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 등으로 일을 관두지 않는 것은 우리 역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여성노동정책은 여성노동력을 값싼 비용으로 활용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다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운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된 여성의 고용보험 취득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한 해 동안 재취업을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6개월 내에 고용보험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재취업 후 다시 일을 그만 둔 데에는 일자리의 질이 열악했던 것이 큰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재취업을 하더라도 이후에 노동조건이나 처우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여성의 노동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취업 여성들의 일자리로 저임금 일자리만을 제시합니다.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 재취업 여성에게 추천하는 일자리 중 보육코디네이터의 경우 일일4시간 주간 20시간을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인데, 월 57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 노동입니다. 또 다른 추천 일자리인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이라는 일은 월10회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교통비를 포함하여 월 37만원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 저임금 일자리가 버젓이 추천 일자리로 소개되고 있는 것일까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는 주로 여성들이 일하면서 생기는 돌봄의 공백을 메꾸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는 전통적인 여성의 일로 여겨져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임금의 핵심 원인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대신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재원을 부담해서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한다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러한 돌봄의 시장화는 일자리의 질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 아무 일자리에나 여성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여성 일자리라며 추천되고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시간제로 일하며 아이도 돌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그 동안 여성운동·노동운동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 보육의 공공성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은 최근 남성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대부분 여성들이 사용함으로써 성별분업 완화효과가 적고, 대다수 비정규직 여성들은 산전후 휴가조차 쓸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보육의 공적보장이야말로 비정규직 여성들까지 그 성과가 공유될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은 1990년 이후 해마다 증설되어 2011년 39,842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5.3%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신축,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4만에 육박하는 보육시설 규모를 고려할 때 국공립보육시설 비중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면피용 계획입니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보육 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

[106주년 3·8 여성의 날]

106주년 3·8 여성의 날 여성노동자대회

우리의 요구

여성을 반쪽자리 노동자로 내모는 시간제일자리 중단하라!
저임금, 고용불안 여성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여성노동권, 생존권 외면하는 박근혜 퇴진하라!



일시와 장소 2014년 3월 8일(토) 2시, 서울도심
주관 민주노총
주최 3·8 세계여성의 날 공동기획단

3/3(월) 11시 106주년 3·8 여성의 날 맞이 기자회견
3/5(수) 2시 시간제일자리 토론회 및 증언대회
* 지역별 별도행사는 자체진행

민주노총